NEWS
2025년 6월 9일 월요일

▶1면 'AI 수석실'서 계속

새 정부의 AI 육성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AI산업 기반을 다지고 있는 광주시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국가AI집적단지 1단계 사업을 통해 2023년 첨단지구에 AI데이터센터를 개관한데 이어 77종의 실증장비를 구축하는 등 세계적인 인공지능 산업 기반을 구축했다. AI데이터센터에는 국내 최초로 엔비디아의 GPU 'H100'을 탑재한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AI집적단지 1단계 사업을 통해 구축한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를 바탕으로 2단계인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단계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사업비 9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광주를 찾아 "국가 AI데이터센터에 이어 고성능 반도체를 집적한 국가AI컴퓨팅센터까지 확충해 AI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해 2단계 사업이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1면 '대통령실 인선'서 계속

코스닥 시장 육성방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해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등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경제수석의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하 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경제와 이론을 두루 거쳤고, 2019~2021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석급으로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류 보좌관은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거치고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지낸 재정 분야 전문가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의 편성·운영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김을 강화하고, 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경제 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문 수석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하던 시절부터 정책적으로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윤곽

20조 추경·규제 완화로 경제 살리기 총력

25만원 민생지원금·지역화폐·빗탕감 등 2차 추경 본격
내년 예산도 지출 확대 전환…기업 혁신 구조개편 병행

올해 '0%대 저성장' 전망치를 물려받고 출발한 이재명 정부가 내수 침체와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 확대'와 '규제 완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최소 20조원으로 예상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내수에 응급 처방을 하고, 중기적으로는 각종 제도적 혁신으로 기업활동을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세법개정안·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통상 6월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어 7월 세법개정안, 8월말 내년도 본예산 등을 순차적으로 준비하는 일정이지만, 6·3 조기대선에 이은 2차 추경 작업으로 시간표가 원점 재검토되는 분위기다.

막 진용을 갖춘 대통령실 경제라인, 조만간 지명될 '경제사령탑'과의 조율을 거쳐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은 확장 기조다. 2차 추경은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개최되면서 2차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이 본격화한 상황이다.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이 소비부진을 타개할 정책으로 상당액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재정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도 2차 추경의 주요 아이템으로 꼽힌다.

추경이 경기침체에 대응한 진통제 성격이라면, 8월 말까지 편성되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인 지원책까지 두루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세제는 증세·감세 등 특정 방향을 내세우기보다는 이슈별로 내수·소비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윤곽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적자국채 발행에 기대어 계속 확정재정을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뚜렷한 데다, 기본적으로 기업 혁신을 통해서만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금지 행위를 엄단하되, 나머지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든 규제 체계를 변경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역동성을 이끌겠다는 개념이다.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혁신, 창조적 파괴, 기업가 정신 등을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의 성장론을 연구한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으로 발탁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6일 담양군 평화예술광장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호국보훈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석유화학·산단 경쟁력 강화 대책 절실"

여수상의, 이재명 대통령·새 정부에 요청

여수상공회의소는 침체의 늪에 빠진 전남 여수 국가산단,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을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요청했다.

여수상의는 최근 건의서를 통해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중국발 공급 과잉 등 복합 위기로 여수산단 내 주요 기업들의 공장 가동 중단과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여수국가산단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수시는 지난달 정부로부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지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지원, 세제 감면, 규제 유예, 산업 재편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기초유분 제품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지원, 러시아산 납사(나프타) 수입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노후 국가산단 대개조를 위한 여천선 철도의 재활용 등 구체적 과제를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한문선 여수상의 회장은 "여수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의 목소리를 정부에 충실히 전달하고, 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철학 아래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마련에 힘쓰겠다"며 "새 정부가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 기반 회복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광주시, 전남대·조선대 지원…글로컬대학 따낸다

본지정 실무추진단 회의…실행계획서·핵심과제 논의

광주시가 전남대학교(단독), 조선대학교-조선간호대학교(통합)의 '글로컬대학30' 최종 선정을 위해 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밀착 총력 지원에 나섰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남대와 조선대-조선간호대가 교육부 공모 '2025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8월 초까지 실행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남대와 조선대(조선간호대) 관계자, 광주시 15개 연계부서,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연구원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실무추진단(TF)'을 구성했다.

지난 5일 회의를 갖고, 지자체 발전전략, 행·재정적 지원, 지역산업 연계 등이 포함된 실행계획서 공동 수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전남대와 조선대가 앞서 교육부에 제출한 예비지정 신청서인 혁신기획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전남대는 '문화·인문 소양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한 혁신기획안을 통해 AI융합인재 2만명 양성, AI융합 창업기업 200곳 육성, 유학생 5000명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대는 '웰에이징 아시아 No.1 대학'을 비전으로 한 혁신기획안을 통해 웰에이징 특화인재 1만명 양성, 기업유치·창업 200곳, 글로벌 인재 5000명 양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AI·반도체·메디헬스케어 등 지역 대표산업과 연계해 대학의 핵심 과제를 분석, 대학과 공동으로 실행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또 밀착 지원을 위해 전남대와 조선대 전담반을 운영, 인재양성·연구개발·산학협력 등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과제를 실행계획서에 담아 완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도, 폭염 선제 대응…인명 피해 최소화

전남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2025년 폭염대응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여름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폭염이 더 일찍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다. 폭염특보 발표 시점도 2010년대에는 7월이었으나, 최근에는 6월로 앞당겨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폭염 대응체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총괄안전관리반, 민감 대상 지원반, 시설안전관리반에 홍보·행사 관리반을 추가하는 등 폭염 대응 TF의 분야별 전담 기능을 보강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지난해 고흥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드론 순찰 활동도 나주, 화순, 영암 등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대응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이상수온대응지원사업 등 수산 분야 124억원, 가축폭염피해 예방시설 지원 등 축산 분야 65억원, 원예 재해예방시설 지원 등 농업 분야 47억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등 산림 분야 372억원 등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